

| | | | |
|--|--|--------------|--|
|  금융위원회 | <h1 style="text-align: center;">보 도 자 료</h1> | |  금융감독원 |
| 보도 | 2017.2.1.(수) 중간부터 | 배포 | 2017.1.31 |
| 책 임 자 | 금융위원회 신용정보팀 고상범 팀장(2100-2620) | 담 당 자 | 진형구 사무관(2100-2623) |
| | 금융감독원 IT·금융정보보호단 임채울 실장(3145-7850) | | 조현희 검사역(3145-7345) |
| | 신용정보원 신용정보부 심현섭 부장(3705-5910) | | 박경옥 팀장(3705-5911) |

제 목 : 개인회생정보를 금융권에 신속하게 공유하여 채무자의 불합리한 대출을 방지하고, 개인회생제도가 적정하게 운용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.

- ◇ 개인회생정보의 공유시점을 '회생 확정시(변제계획인가 결정시) → 회생신청 직후 시점(금지명령 등 재산 동결명령시)'으로 선행 조정
- 다만, 회생정보의 공유시점을 선행하더라도 회생결정이 최종 확정되기 전에는 신용등급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조치

1 추진 배경

- 최근 개인회생 신청자 수*와 회생신청자가 보유한 신용 대출 금액**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

* 회생신청자 수 : ('11년) 6.5만명 → ('13년) 10.6만명 → ('15년) 10.0만명
 ** 회생확정시 평균 신용대출액(28개 금융사, KCB) : ('11년) 2.5천만원 → ('14년) 3.1천만원

- 개인회생정보는 현재 회생신청 이후 최장 1년 이상 경과된 시점(변제계획 인가시)에 신용정보원에 등록·공유됨에 따라,

- 회생신청인의 채권 금융회사가 아닌 경우에는 회생결정의 최종 확정 전에는 회생신청 사실을 상당기간 알 수 없는 상황

* 채권자인 금융회사는 회생신청 후 법원의 금지명령 등을 통보받아 사전에 인지 가능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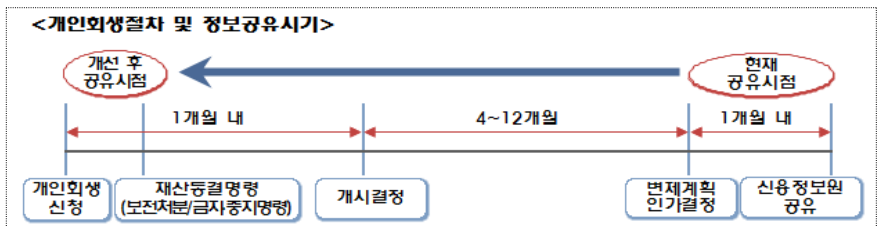
- 이에 따라, 회생정보가 금융권에 늦게 공유된다는 점을 이용하여 회생신청 이후 신규대출을 받는 경우가 상당수 발생*

* '12~'14년도 28개 금융사 고객 중(KCB 집계) 회생신청 후 신규 대출자는 75,000명(회생신청자의 45.8%), 대출잔액은 9,890억원(회생신청자 대출총액의 19.8%)
 → '15년 샘플조사(2개사)에서도 회생신청 후 신규 대출 비중은 46.8%(8,175명/17,468명) 수준

- ① 특히, 악덕 브로커의 권유 등에 따라 신규 대출을 받은 이후 회생결정시까지 고의로 이를 갚지 않고 회생결정 확정에 따라 채무조정을 받거나,

- ② 회생절차가 취소되어 더 큰 빚을 지는 사례 등이 발생하고 있음

⇒ 개인회생정보의 공유시점을 선행 조정하여, 회생신청 후 불합리한 대출을 방지하고, 개인회생제도의 적정한 운영을 지원할 필요



개인회생 신청 후 신규 대출 실행 사례

▶ (사례 1) '16년 1월초, 회사원 A씨는 인터넷 카페를 통해 알게 된 브로커 B씨를 통해 개인회생을 신청한 후 C 저축은행에 신규 대출을 신청. C 저축은행은 신용정보원 등에 A씨의 정보를 조회하였으나 특별한 이상이 없어 연소득이 확실한 A씨에게 대출을 실행. 이후 A씨는 이자 등 채무를 상환하지 않고 '16.12월 회생결정이 확정됨에 따라 채무조정을 받게 되었음. C 저축은행은 동 대출금 상당액을 손실로 처리.

▶ (사례 2) 개인사업자 갑은 영업 악화로 개인회생을 신청하기로 결정하고 지인으로부터 브로커 을을 소개 받음. 브로커 을은 채무가 많아 회생이 용이하고 회생 확정 후 대출금을 갚지 않아도 된다고 조언하며 회생 신청 후 추가 대출을 받을 것을 권유. 갑은 브로커 을의 조언에 따라 병 대부업체로부터 추가 대출을 받았으나 개인회생 절차가 취소되어 더 큰 빚을 지게 됨.

2 | 개인정보정보 공유 확대방안

- **(정보공유 시점)** 개인정보정보의 금융권 공유시점을 **개인회생 신청 직후인 채무자 재산에 대한 동결명령시점***(통상 신청 후 1주일 이내)으로 **선행 조정**

* 채무자 재산에 대한 법원의 보전처분, 금지명령, 중지명령 시점

- 유권해석을 통해 회생절차 중 재산동결명령이 신용정보에 해당한다는 점을 명확히 하여 동 정보의 등록·공유 근거를 마련*

* 현재는 신용정보의 범위를 규정하는 신용정보법 시행령상 '법원의 개인회생과 관련된 결정'을 '변제계획인가 결정'으로 한정하여 해석해 왔던 측면

- **(정보공유 방식)** 신청자의 채권 금융회사는 법원으로부터 금지명령 등 재산동결명령을 받은 즉시 **신용정보원에 동 사실을 등록하여 금융권에 공유***(신용정보원에 등록 중인 대부업권 포함)

* 회생절차가 취소되는 경우(회생신청 취하, 변제계획 인가 전 폐지 등), 채권 금융회사에 동 사실이 통보되므로 공유정보의 즉시 해제도 가능

- 다만, 회생결정이 최종 확정 전이라는 점을 고려하여 **CB사 신용등급에는 반영하지 않고,**
- 회생절차 진행 중 불합리한 대출 방지 목적으로만 한정적으로 활용

3 | 기대 효과

- **(개인회생제도 악용사례 방지)** **개인회생** 브로커 등을 통한 불합리한 대출 및 고의적인 면책 시도를 방지함으로써
- **개인회생제도의 남용을 예방하고, 과도한 채무로 고통 받는 선의의 채무자들의 재기 지원을 위한 회생제도 본연의 기능에 충실해 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**

- **(합리적 여신심사)** 금융회사 등이 여신심사시 불필요·불합리한 대출을 최소화함으로써 채무건전성을 제고할 수 있고,
 - 반드시 자금이 필요한 수요자들에 대하여 보다 원활한 대출 공급이 가능
- **(과도한 채무 예방)** 불필요한 대출 실행 후 회생 절차가 취소되어 추가적인 채무까지 떠안게 되는 채무의 악순환을 예방하고,
 - 금융소비자의 합리적인 채무 관리에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

4 | 향후 계획

- '17.2월초 금융위 유권해석을 실시하여 금지명령 등 재산동결명령이 신용정보에 해당됨을 명확히 함*

* 향후 신용정보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금지명령 등 재산동결명령이 신용정보의 범위에 포함된다는 점을 명시적으로 규정

- 신용정보원의 「일반신용정보 관리규약」을 개정하여(2.7일), 개인정보정보의 등록 등에 관한 세부사항 규정 → 전산시스템 구축 등 후속조치 후 4.1일부터 시행 예정




본 자료를 인용하여 보도할 경우에는 출처를 표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<http://www.fsc.go.kr>



넓게 들겠습니다
바르게 알리겠습니다